No. 25-05

CFE REPORT

CFE Report

2025. 6. 5.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고 광 용(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김 상 엽(자유기업원 연구원)
한 규 민(자유기업원 연구원)
이 호 경(자유기업원 연구원)

자유기업원

〈요 약〉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강력한 행정개혁 의지를 밝히며 대통령실 산하에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설립하였다. DOGE는 기존의 부처와 달리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로, 디지털 전환, 규제 개혁, 재정 절감, 인력 구조조정 등 전방위적인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 조직은 18개월의 임기를 가진 임시 조직으로, 2026년 7월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관직은 일론 머스크가 맡았으나, 지난 5월 29일(목)에 130일의 특별공무원 임기를 종료했다.

DOGE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규제개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대 10 규제 철폐 원칙”을 채택해, 신규 규제를 제정할 때마다 기존 규제를 10건 이상 폐지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새로 제정되는 규제의 총 순비용은 0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의무화하여, 규제의 양적 증가를 막고 민간에 부담되는 비용을 제한하려 했다. 또한 각 부처는 연간 규제비용을 보고하고,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특히 헌법 위반, 법률 근거 없는 행정규제, 과도한 민간부담 등 7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는 우선 철회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실제로 288억 달러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규제 문서에서 약 80만 개의 단어가 삭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정 및 지출 부문에서도 DOGE는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연방정부의 계약, 보조금, 대출 지출 내역은 중앙기록 시스템에 등록되고, 모든 지출에는 간단한 사유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출이 자동으로 보류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거나 국익에 반하지 않는 보조금과 계약은 대거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약 10,800건의 계약이 해지되고, 1만 5,000건 이상의 보조금이 종료되며 총 1,750억 달러의 절감액이 발생하였다. 납세자 1인당 절감액은 약 1,087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력 구조조정 또한 DOGE의 중요한 개혁 과제였다. 연방정부는 퇴직자 4명당 1명만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국세청과 같은 일부 기관에는 채용 전면 동결 조치를 유지하였다. 특히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사업이나 법적 의무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임시직 및 재고용 연금수급자와의 계약도 단계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관료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정책은 미국 내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 역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한 바 있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인력과 조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미국 DOGE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행정개혁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 또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실이나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각 부처의 독립성과 할거주의로 인해 조율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행정개혁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기반의 행정개혁 성과 공개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DOGE는 전담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 절감액, 계약 종료 건수, 규제 삭제 수 등을 수치화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셋째, 부처·기관별 규제총량제와 함께 1대 10 규제철폐 원칙이나 규제 순비용 제로화 관리 등 실질적인 규제 정비·철회·폐지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 및 보조금 지출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불필요 출장 통제, 부동산 임대 해지, 조직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 및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역시 한국 정부가 검토해야 할 요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DOGE 활동과 행정개혁은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등 행정개혁의 가시적·실질적 추진뿐만 아니라 대국민 수요자 중심의 투명성 확보 및 정부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

〈목 차〉

I. 서론: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추진 논의의 필요성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추진
2.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추진 등 '작은 정부' 논의의 필요성

II. 대통령 행정명령 중심 미국 정부효율부 및 행정개혁 현황
1. 대통령 행정명령(2025.01.20.): 정부효율부 설립 및 집행
2. 대통령 행정명령(2025.01.31.):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
3. 대통령 행정명령(2025.02.11.): 대통령 "정부효율부" 인력 최적화 계획 시행
4. 대통령 행정명령(2025.02.19.): 합법적 거버넌스 보장 및 대통령 "정부 효율부" 규제 완화 계획(주도) 시행
5. 대통령 행정명령(2025.02.26.): '정부효율부' 비용 효율성 계획(주도) 시행
6. 대통령 행정명령(2025.03.14.): 연방 관료제 감축의 지속
7. 사실자료(2025.02.18.):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 낭비성 지출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 지시

III. 미국 정부효율부 활동 성과 현황
1. 절감액(Savings)
2. 규제 개혁(Regulations)
3.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 재정 적자(Spend)
4. 공무원과 인건비 감축(Workforce)

IV. 미국 트럼프 행정부 행정개혁 분석과 한국적 시사점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활동과 행정개혁 분석
2. 한국적 시사점

V. 결론: 새정부 규제개혁과 정부 효율화 방향 제언

참고 문헌

I 서론: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추진 논의의 필요성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추진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행정개혁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월 20일, 취임하면서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라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임기를 시작했음
  - 취임 첫날, 바이든 전 행정부의 78개 행정조치를 무효화하는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하고, 10일 간 총 69건의 대통령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를 발표하며 강력한 행정개혁 의지를 드러냈음(박정원, 2025)
  - 연이은 행정조치는 에너지, 안보, 이민 등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DEI 정책 폐지와 연방공무원 체제 개혁, 공무원 실적·성과주의 및 책임성 강화 등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 등 행정개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주도 역할 부여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같은 날, 임시조직 형태로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하 'DOGE') 설립 및 공식적인 출범을 단행함(Executive Order NO.14158).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의 디지털 전환, 규제개혁, 예산 절감, 조직 효율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음
  - 정부효율부는 2026년 7월 4일에 활동 종료 예정으로 18개월 간 유지되는 임시조직으로 설립되었음. 장관은 일론 머스크인데, 지난 5월 29일(목)에 130일 근무 특별공무원 임기를 종료했음

- 일론 머스크의 비용절감 계획 및 인력감축 상황
  - 일론 머스크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25년 5월 말까지 약 1조달러(1,376조원)의 비용절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뉴데일리, 2025.3.28.)
  - 뉴욕타임스는 연방정부 감원 규모가 ‘25.4.8. 기준, 최소 약 56,230명이며, 희망퇴직 접수 인원도 약 75,000명, 이외 추가 감원 계획 규모는 최소 146,32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New York Times, 2025.4.8.)

2.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추진 등 '작은 정부' 논의의 필요성

-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부 설립의 목적을 정부의 불필요한 활동을 줄여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음(백악관 홈페이지, 2025.2.11.; 김을식 외, 2025). 이는 행정학 이론 중 신공공관리론에서 얘기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는 아담 스미스 등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에서 주장하던 내용이자, 20C 후반 영국 보수당 대처 수상의 행정개혁, 미국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등과 부합하는 것임. 20C에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재정과 인력 감축 등 정부규모 축소와 행정 효율화, 민영화 및 민간자율성 제고 등에 있어 성공을 거둔 행정개혁이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작은 정부' 슬로건 아래 정부기구 축소와 통폐합, 공무원 인원 감축과 규제완화 등을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보여주진 못함.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슬로건 아래 정부기구 축소 및 검경·공안 기능 재조정, 공무원 감축 및 구조조정 등 대대적 행정개혁에 나서서 처음으로 공무원 약 30만명을 감소시킨 바 있음

- 상당히 알려져 있는 행정학 이론 중 하나인 파킨슨 법칙에 따르면, 공무원 수나 조직은 '업무량 증가'와 직접적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기에 정부조직의 양적 팽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임
  - 파킨슨은 부하 배증의 법칙(제1공리), 업무 배증의 법칙(제2공리) 등을 제시하며 영국해군의 조직의 크기나 업무량이 줄었지만, 행정인력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이처럼 정부부문은 파킨슨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규모와 인력의 축소는 쉽지 않은 일로, 많은 정부의 시도는 있었으나 행정개혁을 성공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음. 특히 정부조직 축소나 인력 구조조정에 맞선 기존 관료제의 저항과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은 쉽게 풀기가 어려운 면이 있음
  - 역대 한국정부의 공무원 수 증감현황을 보면 김대중 국민의 정부를 제외하고는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약 117만명의 공무원 수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1〉 공무원 역대정부 증감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s://www.org.go.kr/psncpa/pbsvnt/selectIrds.do).

- 이러한 측면에서, 본 리포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 행정개혁 조치에 대한 추진 내용과 과정을 대통령 행정명령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고 한국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함

Ⅱ 대통령 행정명령 중심 미국 정부효율부 및 행정개혁 현황

1. 대통령 행정명령(2025.01.20.): 정부효율부 설립 및 집행

- 제1조 목적: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
  - 본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DOGE 아젠다 시행을 위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설립하며, 연방정부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로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함

- 제2조 정의: 기관과 기관장
  - 기관(Agency): 미국 법전 제5편 제551조에 명시된 정의, 대통령 집무실 및 그 하위 조직은 미포함
  - 기관장(Agency Head): 일반적으로 장관(Secretary), 관리자(Administrator), 위원장(Chairman). 국장(Director) 등을 의미하며,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최고 책임자를 뜻함

- 제3조 DOGE의 구조
  -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의 개편 및 명칭 변경: 미국 디지털 서비스는(United States Digital Service)는 이제 "미국 DOGE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 USDS)"로 공개적으로 명칭 변경되며,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함
  - 임시 조직 형태 설립: USDS 내 대통령 집무실 소속 USDS 관리자가 임명되며, 이는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함. 미국 법전 제5편 제3161조에 따라 “미국 DOGE 서비스 임시조직(US DOGE Service Temporary Organization)"으로 설립됨. 본 조직은 USDS 관리자가 이끌며, 대통령의 DOGE 아젠다를 18개월간 추진하는 데 전념하며 2026년 7월 4일에 종료됨. 본 조직의 종료는 이 명령의 타 권한이나 조항의 종료 또는 수정으로 이해되지 않을 것임
  - DOGE 팀 구성: 각 기관장은 USDS와 협의하 해당 기관 내 최소 4명 구성 DOGE 팀을 설립해야 하며, 이들은 본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용·배정 의무. 팀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팀장 1명, 기술자 1명, 인사전문가 1명, 변호사 1명 구성, 기관장은 DOGE 팀장들이 USDS와 협력 하 대통령의 DOGE 아젠다 실행 보장 의무

- 제4조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연방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
  - USDS 관리자는 정부 전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IT시스템의 품질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현대화를 주도함. 이는 기관 간 네트워크 및 시스템 상호운용성 촉진, 데이터 무결성 보장, 책임있는 데이터 수집과 동기화 지원 등을 포함함
  - 기관장들은 USDS가 모든 비밀이 아닌 기관 기록,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IT 시스템에 대해 완전하고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USDS는 엄격한 데이터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본 명령은 USD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기존 모든 행정명령과 규정을 대체함. 단, 대통령만이 직접 수정할 수 있음

- 제5조 일반조항
  - 본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재정 허용범위 내 시행
  - 본 명령은 미국 또는 그 산하기관, 직원 혹은 제3자를 상대로 법적 권리나 혜택을 창출하지 않음

2. 행정명령(2025.01.31.):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

- 취지
  -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 특히 「1921년 예산 및 회계법」(수정 31조 USC 1101 등)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신중한 재정 운영 촉진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명함

- 제1조 목적
  - 끊임없이 확장되는 복잡한 연방 규제는 수백만 미국인의 삶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과 혁신 능력을 저해하며,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그 영향이 크지만, 이러한 규제는 단지 공식 규정뿐 아니라 규칙, 각서, 행정 명령, 지침, 정책 성명, 부처 간 협약 등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준수 비용 및 비준수 리스크가 증가함
  -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경제적 번영, 국가 안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방 규제 준수에 필요한 민간 지출을 대폭 줄이고자 함. 이를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하나 제정될 때마다 기존 규제 최소 10개를 폐지하도록

함. 이 조치는 규제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새로운 규제의 비용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임

- 제2조 정책
  - 행정부는 공공 및 민간 재원의 지출에 있어 신중하고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미국 국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 완화를 정책으로 삼음

- 제3조 2025 회계연도 규제 상한선
  -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행정부서나 기관은 새로운 규제를 제안하거나 제정할 경우, 기존 규제 최소 10개를 폐지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 2025 회계연도 기준, 모든 기관장은 새로 제정되는 규제(폐지되는 규제 포함)의 총 순비용이 "0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며, 예외는 법률이나 관리예산실(OMB) 장의 지시에 따름
  - 새 규제와 관련된 신규 순비용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 기존 규제 10개 이상 폐지를 통해 상쇄되어야 함
  - 관리예산실장은 본 조항 이행을 위한 지침을 기관장에게 제공함. 이 지침은 규제 비용 측정 및 추정 방식, 신규 및 상쇄 규제 판단 기준, 기존 규제의 비용 산정 기준, 회계연도별 비용 처리 방식, 규제 발행 시점 및 기관 간 비용 상쇄 방식, 긴급 상황 및 예외 허용 요건 등을 포함해야 함

- 제4조 관리예산실 제출용 연간 규제 비용 보고
  - 2026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규제계획」(행정명령 12866)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과 같이 보고함. (a)각 기관장은 신규 비용 수반 규제와 해당 비용 상쇄 규제 집계 보고, 규제별 비용 또는 절감액 추정치 제공. (b)대통령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실장 승인 모든 규제는 「통합규제 의제」(Unified Regulatory Agenda)에 포함. 실장 승인 없이 규제 추가·제거 불가. (c)법률상 요구되지 않는 한, 「통합규제 의제」에 미포함 규제는 실장의 사전 서면 미승인 시 발행 불가, (d)대통령 예산안 작성 시, 실장은 각 기관별 신규 규제 및 폐지 규제를 통해 허용 가능한 총 순비용 한도를 제시해야 함. 이 한도 초과 규제는 법률상 요구 혹은 실장의 서면 미승인 시 불가함. (e)실장은 본 조항 이행을 위한 추가 지침을 기관장에게 제공함

- 제5조 정의
  - 본 명령 상 “규제”와 “규칙”의 의미: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해석·규정하거나 정부 기관의 절차 또는 업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적 또는 특정한 적용 가능성과 미래 효력을 가지는 정부기관의 공식 성명(statement)을 말함. 여기에는 규제, 규칙, 공문, 행정명령, 지침, 정책성명, 부처 간 협약 등이 포함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정 여부 관계없이 적용됨
  - 적용 제외 사항: (a)군사, 국가안보, 국토안보, 외교, 이민 관련 기능 규제. (b)기관의 조직·관리·인사 규제. (c)국장이 면제한 규제 또는 범주(민간부문에 비용이나 부담이 경미하거나 대통령 수석보좌관 혹은 정책담당 부수석보좌관이 면제 요청 시 등)

- 제6조 집행
  - 실장은 본 명령 집행의 총괄책임자이며, 제3조에서 언급한 “10:1 규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규제 식별, 정의 기준, 비용 추정 및 표준화 절차, 「행정절차법」 준수 방식 등 포함되어야 함
  - 실장은 2023년 11월 9일 자 「OMB 회람 A-4」 및 모든 관련 부속문서·지침을 폐지하고, 2003년 9월 17일 자 기존 버전을 복원함
  - 재무장관과 실장은 2018년 4월 11일 체결된 「재무부-관리예산실 세제 규제 검토 협정(MOA)」을 복원함

- 제7조 분리가능성 & 제8조 일반 조항
  - 본 명령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결되더라도, 그 외 나머지 조항과 다를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
  - 본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되어야 함
  - 본 명령은 어떤 당사자에게도 법적 권리나 구제 수단을 부여 혹은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지 않음

3. 대통령 행정명령(2025.02.11.): 대통령 “정부효율부” 인력 최적화 계획 시행

- 제1조 목적: 정부 책무성 회복
  - 미국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명령은 연방 관료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을 시작함. 낭비, 비대화, 폐쇄성의 제거로 본 행정부는 미국의 가정, 근로자, 납세자, 그리고 정부 체계 자체를 강화할 것임

- 제2조 정의
  - “기관(Agency)”이란 미국법전 제44편 제3502조에 정의된 바에 따름. 단, 대통령 직속 행정부 및 그 하위 구성요소는 제외함
  - “기관장(Agency Head)”이란 기관 내 최고위직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장관(Secretary), 관리자(Administrator), 위원장(Chairman), 실장(Director) 등을 포함
  - “DOGE 팀장”이란 2025년 1월 20일자 「행정명령 14158 정부효율부(DOGE) 설립 및 집행」에 따라 각 기관에 설치된 DOGE팀 책임자 의미
  - “직원(Employee)”이란 미국법전 제5편 제2105조에서 정의된 자로, 행정부에 복무하며 해당 조항 상 직원 자격을 갖는 자 포함
  - “이민 집행(Immigration enforcement)”이란 연방 이민법 위반에 대한 수사, 집행 또는 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입국·재입국 또는 고용을 처벌하는 법률의 적용도 포함됨. 단, 이민 혜택 신청 지원이나 이민 집행 또는 추방·제거 방지 활동은 미포함
  - “법 집행(Law enforcement)”은 법 위반 예방, 탐지, 수사, 기소 또는 관련자의 구금 활동 또는 그 감독과 연방, 주, 지방, 외국 정부 관계자의 신변 안전 보호 등을 포함함
  - “임시 직원(Temporary employee)”이란 「5 C.F.R. 제316부」 정의 의미를 따름
  - “재고용 연금수급자(Reemployed annuitant)”란 「5 C.F.R. 제837부」에 정의된 의미를 따름

- 제3조 연방 공무원 개혁을 통한 효율성·생산성 극대화
  - 채용 비율: 2025년 1월 20일자 대통령 각서 「채용 동결」에 따라, 관리예산실(OMB) 실장은 효율성 향상 및 자연 감소를 통해 연방정부 인력 규모 축소 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함. 본 계획은 각 기관이 퇴직자 4명당 1명만 신규 채용하도록 하며, 계획 내 허용된 예외사항에 따름. 단, 국세청(IRS)에 적용 중인 채용 동결은 계속 유지됨. 이 비율은 공공안전, 이민 집행, 법 집행 관련 업무에는 미적용. 각 기관장은 「행정명령 14170 연방 채용절차 개혁 및 공직의 공정성 회복」에 따른 연방 채용계획도 따라야 함
  - 채용 승인: 각 기관장은 DOGE 팀장과 협의하여, 자료 기반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채용을 긴급 필요 분야에 집중함. 채용 결정은 DOGE 팀장과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함. DOGE 팀장이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직위는 기관장이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이상 채용하지 않음. DOGE 팀장은 매달 기관의 채용 현황을 미국 DOGE 서비스(USDS) 행정관에게 보고함

-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RIF): 각 기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며, RIF 대상 부서에서 일하는 임시직 및 재고용 연금수급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준비를 즉시 시작해야 함. RIF 우선 대상은 1)법률에 명시된 기능이 아닌 모든 사무국, 2)기관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관련 사업, 3)본 행정부에 의해 중단·폐쇄된 사업이나 기능, 4)관리예산실 웹사이트의 기관별 비상계획(Agency Contingency Plans)에서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지 않은 법적 의무 없는 부서 또는 직원, 단, 공공안전, 이민 집행, 법 집행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규칙 제정: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관리실(OPM) 실장은 1)세금 신고 등 일반 법적 의무 불이행, 2)연방 공무원 자격 요건(시민권 등) 미충족, 3)비밀유지 의무 불이행 또는 서약 거부, 4)정부 자산의 절도, 오용,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실 등을 포함하는 적격성 기준 개정안을 담은 규칙 제정을 개시해야 함
- 조직 재편 계획 수립: 기관장은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및 하위 구성 요소 중 법률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폐지 또는 통합 가능 여부 포함 보고서를 관리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이행 보고서 제출: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240일 이내에 USDS 행정관은 대통령에게 본 명령의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각 조항의 연장·수정·종료 여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함

● 적용 제외 사항
- 군인
- 각 기관장은 국가안보, 국토안보, 공공안전 관련 직위에 대해 본 명령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 인사관리실 실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명령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인력 감축 촉진에 협조함

● 일반 조항
- 본 명령은 관련 법률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되어야 함
- 본 명령은 미국 정부, 그 부처 및 기관, 공무원 또는 타인에 대해 법적 권리나 구제 수단을 창출 혹은 주장 수단으로 해석되지 않음

4. 대통령 행정명령(2025.02.19.): 합법적 거버넌스 보장 및 대통령 “정부효율부” 규제 완화 계획(주도) 시행

- 제1조 목적: 행정국가의 해체 시작 및 규제 완화,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 종식 및 헌법적 권력분립 회복
  - 본 행정부의 정책은 연방 행정부의 제한된 집행 자원을 헌법에 기반 한 연방법령에 의해 명확히 허용된 규제에 집중하고,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의 해체를 시작하는 데 있음.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종식시키고 헌법적 권력분립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제2조 위법 혹은 국가이익 저해 규제 철회
  - 각 행정부처 장관은 정부효율부(DOGE) 팀장 및 관리예산실(OMB) 실장과 협력하여, 해당 부처가 단독 또는 공동 관할 모든 규제가 관련 법률 및 행정부 정책과 일치 여부 검토 절차를 시작해야 함.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 시 법무장관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규제를 식별해야함. 1)헌법에 위배되거나, 연방정부에 부여된 헌법 상 권한 범위 초과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 야기 규제, 2)입법 권한을 위법하게 위임받아 제정된 규제, 3)해당 법령의 적절한 해석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규제, 4)명확한 법적 권한 없이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규제, 5)민간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이 이를 상회하지 못하는 규제, 6)기술 혁신, 인프라 개발, 재난 대응, 물가 안정, 연구개발, 경제 발전, 에너지 생산, 토지 이용, 외교 정책 목표 등을 심각하고 부당하게 저해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규제, 7)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민간 기업 활동 및 창업을 방해하는 규제
  - 상기의 규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각 부처는 1993년 9월 30일자 행정명령 12866(규제 계획 및 검토)에 규정된 “중요한 규제행위(significant regulatory action)”의 정의에 부합하는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부처 장은 (a)항에서 분류한 규제 목록을 정보규제관리실(OIRA)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OIRA 실장은 각 부처 장과 협의하여, 위 규제들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통합규제 계획(Unified Regulatory Agenda)을 수립해야 함

- 제3조 합법적 통치 보장 위한 집행 재량
  - 법적 의무 이행, 공공 안전 보호, 국가 이익 증진 등 최우선 책임을 전제로

하여, 각 부처는 1)해당 법률의 가장 타당한 해석(best reading)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2)헌법이 연방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규제 등은 규제 집행을 일반적인 우선순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제한된 집행 자원을 보존해야 함.

- 각 부처 장관은 규제 검토를 통해 식별된 규제들에 대한 현재의 집행이 법률 및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자원 절약과 합법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처의 장관은 관리예산실장과 협의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해당 규제의 집행이 헌법, 법률 또는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집행 절차를 종료하도록 지시해야 함

● 제4조 신규 규제 제정

- 각 부처는 규제안을 OIRA(정보규제관리실)의 검토를 위해 제출할 때, 기존의 행정명령 12866에 규정된 절차를 계속해서 따라야 함. 또한, 부처의 장관은 가능한 조속히 신규 규제 가능성에 대해 DOGE 팀장 및 OIRA 실장과 협의해야 함. 신규 규제를 평가할 때에는, 행정명령 12866에서 제시한 기준 외에도, 본 명령 제2조에 명시된 기준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제5조 집행

- 관리예산실(OMB) 실장은 필요에 따라 본 명령의 집행을 위한 지침을 수립해야 함

● 제6조 정의

- 기관(Agency): 44 U.S.C. 350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며, 단 대통령실(EOP) 및 그 산하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 기관장(Agency head): 각 기관의 최고위직 공무원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장관(Secretary), 관리자(Administrator), 위원장(Chairman), 실장(Director) 등이 이에 해당함
- DOGE 팀장(DOGE Team Lead): 2025년 1월 20일자 행정명령 14158호(대통령의 '정부 효율성 부서' 설립 및 이행)에 따라 각 기관에 설치된 DOGE 팀 책임자
- 집행 행위(Enforcement action): 민사 또는 형사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기관이 민간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민간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도를 의미하며, 그 행위에 대해 기관이 과거에 어떤 명칭을 부여했는지와는 무관함

- 규제(Regulation): 행정명령 12866 제3조 (e)항에서 정의한 “규제 행위(regulatory action)”를 의미하며, 2007년 1월 18일 행정명령 13422호(규제 계획 및 검토에 관한 행정명령 12866의 추가 개정)에서 정의한 “지침 문서(guidance document)”도 포함됨
- 고위 임명자(Senior appointee):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자, 또는 대통령의 임명이 요구되는 직위의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비경력직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소속 인원(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내 체계의 인원)

● 제7조 예외 사항
- 군사, 국가안보, 국토안보, 외교, 또는 이민 관련 기능과 관련된 모든 조치
- 행정부 내부 직원 관리 관련 사항
- 관리예산실(OMB) 실장이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타 모든 사항

● 제8조 분리가능성 & 제9조 일반 조항
- 본 명령의 어떠한 조항이나, 그 조항의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과 그 조항들이 다른 인물이나 상황에 적용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예산 허용 범위 내 이행
- 본 명령은 미국 연방정부, 그 부처, 기관 또는 산하기관,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혹은 그 외 다른 누구를 상대로 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법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거나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하지도 않음

5. 대통령 행정명령(2025.02.26.): ‘정부효율부’ 비용 효율성 계획(주도) 시행

● 제1조 목적
- 본 명령은 계약, 보조금 및 대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출을 변화시켜 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 공무원들이 미국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2조 정의
- 행정관(Administrator): 2025년 1월 20일자 행정명령 제14158호(대통령의 "정부효율부" 설립 및 시행)에서 정의된 미국 DOGE 서비스의 관리자

- 기관(Agency): 미국 법전 제44조 제3502항에 정의된 용어를 의미하며 대통령실 및 그 구성 요소는 제외됨
- 기관장(Agency Head): 기관의 최고 직책을 맡은 사람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장관, 관리자, 위원장 또는 실장 등이 있음. 기관장은 본 명령에 명시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내에서 지정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음
- 적용대상 계약 및 보조금(Covered contracts and grants): 연방정부의 계약, 보조금, 대출 및 관련 수단을 통한 재량 지출을 의미함.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민 집행, 법 집행, 군사, 공공 안전, 정보기관과 관련된 지출 및 기타 중요한 긴급 지출은 제외됨. 해당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결정하며 기관의 DOGE 팀 리더에게 통보해야 함
- DOGE 팀 리더(DOGE Team Lead): 각 기관에서 DOGE 팀을 이끄는 자를 의미함(행정명령 14158)

● 제3조 납세자의 돈(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비용 절감(감축)

- 계약 및 보조금 정당화: 각 기관장은 기관의 DOGE 팀 리더의 요청에 따라 각 기관의 대상 계약 및 보조금에 따른 모든 지불을 원활하게 기록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기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각 지불에 대해 해당 지불을 승인한 기관 직원이 제출한 간단한 서면 사유서가 포함되어야 함. 이 시스템은 기관장이 승인한 직원이 해당 지불에 대해 간단한 서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불을 일시 중지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메커니즘(절차)을 포함해야 함. 전자에서 설명된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관장은 기관의 DOGE 팀 리더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 직원이 지불을 승인하기 전에 간단한 서면 사유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발행해야 함. 다만, 기관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예외는 제외될 수 있음.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그리고 기관장이 실현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본 조항에서 설명한 지불 정당화는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함
- 계약 및 보조금 검토: 각 기관장은 기관의 DOGE 팀 리더와 협의하여 모든 기존의 대상 계약 및 보조금을 검토하고, 적절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전반적인 연방 지출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촉진하고 행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과 보조금을 종료하거나 수정(재협상 포함)해야 함. 이 과정은 즉시 시작되며, 교육기관 및 외국기관에 대한 대상 계약 및 보조금의 자금에 대해 낭비, 사기, 남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각 기관장은 본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검토를 완료해야 함

- 계약 및 보조금 절차 검토: 각 기관장은 기관의 DOGE 팀 리더와 협의하여 각 기관의 계약 정책, 절차 및 인력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함. 각 기관장은 본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과정을 완료해야 함. 검토 기간 동안 새로운 계약 담당자 임명을 승인하거나 발급할 수 없음. 단, 기관장이 해당 승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계약 및 보조금 승인 : 본 조항 계약 및 보조금 절차 검토에서 지정된 검토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기관장은 기관의 DOGE 팀 리더와 협의하여 정부 효율성과 나의 행정부의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 수정에 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함. 기관장은 이러한 지침 발행 전에도 사례별로 새로운 계약을 승인할 수 있음. 각 DOGE 팀 리더는 계약 활동에 대한 월간 정보 보고서를 행정관에게 제공해야 함. 본 명령에 따른 계약 및 보조금 정당화 과정이 확립되면 이 보고서는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과정에 의해 제공된 모든 지불 정당화를 포함해야 함
-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정당화: 각 기관장은 기관의 DOGE 팀 리더의 지원을 받아 각 기관 내에서 회의 및 기타 필수적이지 않은 목적을 위한 연방 자금으로 여행 승인을 중앙에서 기록하는 기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시스템이 마련되면 기관장은 여행 승인자가 간단한 서면 정당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연방 자금으로 회의나 기타 필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여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 각 DOGE 팀 리더는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월간 정보 보고서를 관리에게 제공해야 함. 이러한 정당화는 법이나 기관장이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한 공개되어야 함
- 신용카드 동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모든 기관 직원이 보유한 신용카드는 본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간 동결된 것으로 간주. 다만, 재난구호 또는 자연재해 대응 보조금, 운영 또는 기타 중요 서비스 종사 직원 보유 신용카드, 또는 그러한 신용카드 사용 직원 관련 요금 제외, 기관장이 기관의 DOGE 팀장과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개별화 또는 범주적 예외가 추가될 수 있음
- 부동산 처분-보고: 본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 기관장은 기관장이 연방 부동산 프로필 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 제출했음을 확인하여 기관장의 관리대상 부동산의 완전하고 정확한 재고를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부동산 처분-임대: 본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장은 정부소유 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에 따라 기관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해지 권한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기관의 DOGE 팀장 및 일반 서비스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인과 협의하여 해당 권리 행사 여부 결정해야 함

- 제4조 적용 제외 사항
  - 법 집행관은 5 U.S.C. 5541(3) 및 5 C.F.R. 550.10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연방 형사 또는 이민법 집행과 직접 관련된 계약 및 보조금을 포함
  - 국토안보부의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및 이민 및 세관 집행
  - 20 C.F.R. 404.1330에 정의된 통일된 서비스
  - 관련 기관장이 기관의 DOGE 팀장 및 OMB 책임자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이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기타 보상 보조금, 계약, 기관 구성 요소 또는 부동산
  - 기밀 정보 또는 기밀 정보 시스템

- 제5조 일반 규정
  - 본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됨
  - 본 명령은 법적으로나 형평법적으로 어떠한 당사자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실체,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을 상대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지 않음

6. 대통령 행정명령(2025.03.14.): 연방 관료제 감축의 지속

- 제1조 목적
  - 본 명령은 대통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연방 관료제 요소의 감축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목적임

- 제2조 연방 관료제 범위 축소
  - 연방 중재·조정 서비스(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미국글로벌미디어청(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 스미소니언 산하 우드로 윌슨 국제학자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미국노숙자간정부위원회(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소수민족기업개발청(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등 연방 기관들의 법률

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 및 부속 조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폐지되며, 해당 기관은 법률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력과 기능만 유지하도록 조정되어야 함

-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기에 열거된 각 기관의 수장은 자신의 기관이 본 명령을 전면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관리예산실(OMB) 실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기관의 기능 중 법적으로 필수적인 부분과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 관리예산실(OMB) 실장 또는 해당 기관의 보조금 심사를 담당하는 부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들이 제출한 예산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법적 요건에 부합하고 종료 절차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 요청은 거부해야 함

● 제3조 일반 조항

- 본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되어야 함
- 본 명령은 미국 정부, 그 부처, 기관, 공무원 또는 그 밖의 누구에게도 법적 권리나 이익을 생성하지 않으며, 법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7. 사실자료(2025.02.18.):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 낭비성 지출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 지시

●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 오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세금 낭비 실태를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각서는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이 종료된 프로그램, 취소된 계약, 중단된 보조금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 세금 낭비에 종지부를 찍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를 통해, 연방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낭비해 왔는지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음.
- 미국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프로그램, 계약, 보조금에 세금을 투입해 왔음. 수년간 납세자들은 해외의 이념적 사업과 국익을 저해하는 국내 단체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왔음. 구체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바이든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전기차 충전소에 지출했지만, 그 중 일부만이 실제로 완공되었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기후 정의는 자유로운 팔레스타인을 통해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배정된 5천만 달러 규모의 환경정의보조금을 취소했음. USAID는 세르비아의 직장과 기업 환경에서 DEI(다양성·형평·포용)를 확산하기 위한 15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포함한 여러 사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음.
-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단체가 드래그쇼와 프라이드 퍼레이드 등 LGBT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 460만 달러를 지원했음.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정 정파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인했음
-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8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불필요한 계약을 취소했으며, 그 중 460만 달러는 단순히 줌과 대면 회의를 조율하는 데 사용된 계약이었음
- 정부효율부(DOGE)는 바이든 행정부가 “유실”시킨 19억 달러의 세금을 회수했음. 미국 회계감사실(GAO)은 작년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매년 2,330억~5,210억 달러를 사기와 부정으로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국민과의 약속 이행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딥 스테이트(한 국가의 공식 정치 지도부와는 별개로 자신들만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며 비공식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작동하는 권력 네트워크)를 청산하고, 부패한 관료와 직업 정치인을 해임하며, 정부의 부패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음
- 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체결한 단체교섭 협약들을 중단시키는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신정부 개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
-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지출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정부효율성부(DOGE)’를 설립했음. “10대 1 규제 철폐 정책”도 추진 중임.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기존 규제 10건이 폐지되며, 모든 새로운 규제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입증되어야만 시행됨
-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십억 달러를 낭비한 정치적 성향의 비효율적 프로그램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과 보조금을 전면 취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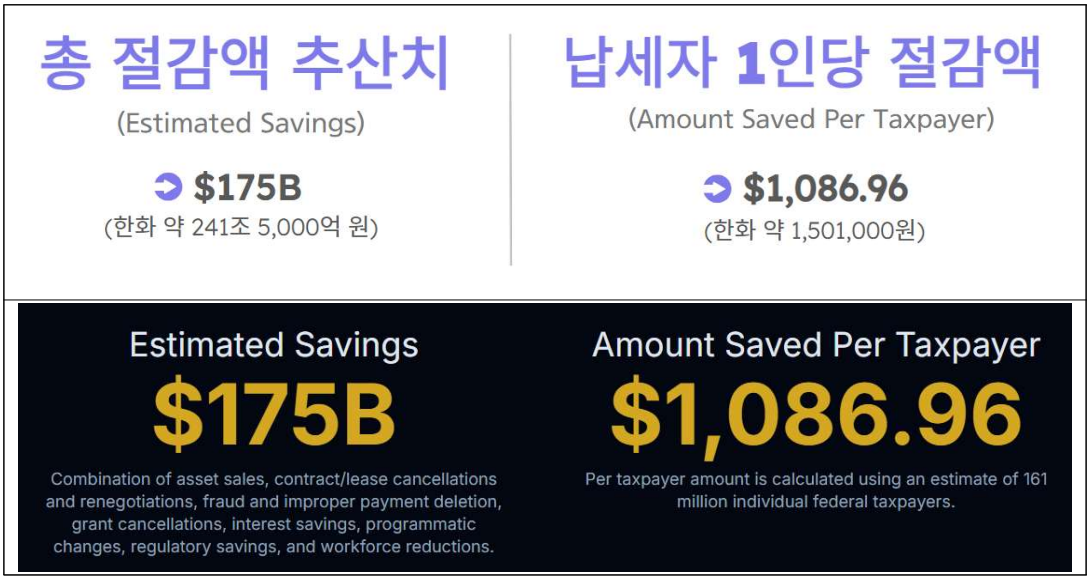
Ⅲ 미국 정부효율부 활동 성과 현황

1. 절감액(Savings)

- 총 절약된 금액: 1,750억 달러 [2025년 5월 26일 기준]
  - 이 절감액은 자산 매각, 계약 및 임대 취소, 재협상, 사기 및 부적절한 지출 제거, 보조금 취소, 이자 비용 절감, 프로그램 변경, 규제 절감, 인력 감축 등 통해 달성

- 납세자 1인당 절약된 금액: 1,086.96 달러 [2025년 5월 26일 기준]
  - 이는 약 1억 6,100만명의 연방정부 납세자를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

〈그림 2〉 정부효율부 활동에 따른 총 절감액 추산치/납세자 1인당 절감액 공시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 법률과 규정을 준수. 모든 지출 내역을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작업 중이며 대략 월 2회 업데이트 중
  - 먼저, 전체 절감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계약, 보조금, 임대 취소 사례 일부를 아래에 게시. 각 기관의 계약 및 보조금 담당자로부터 직접 전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 연방정부 부처별 효율성 순위 22개 전 기관 발표 [2025년 5월 26일 기준]
  - 부처별 지출 절감 순위(상위/하위) 공시: 1위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위 총무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3위 교육부(ED: Department of Education), 4위 인사관리실(OPM: Office of Personnel Mgmt), 5위 노동부 DOL(Department of Labor) 등

〈그림 3〉 연방정부 부처별 효율성 순위 공개(22개 전 기관 대상)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 계약 내역 공개 [2025년 5월 26일 기준]
  - 총 가치(Total Value: 옵션을 포함한 전체 예상 지출액) & 절감액(Savings:

총 가치에서 현재 실제 지출 확정 금액을 뺀 차액)

- 총 10,871건의 계약 종료(해지)가 공개되었으며, 약 320억 달러의 절감이 이루어짐

〈표 1〉 연방정부 기관별 계약내역 공개(절감액 상위)

기관명	계약업체	사업 내용	날짜	절감액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패밀리 엔데버스	난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	3/25/2025	$2,902,177,561.72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센테니얼 테크놀로지스	기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통합 서비스	2/18/2025	$1,900,000,000.00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A1FEDIMPACT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	4/14/2025	$1,764,530,973.00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엑센추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4/15/2025	$1,417,616,544.00
공군부(Department of Air Force)	딜로이트 컨설팅	디지털 서비스 전환 지원	5/20/2025	$832,000,000.00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시큐리강스	고복잡성 전환 프로젝트 지원	4/14/2025	$565,707,256.50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 보조금 종료 및 총(누적) 절감액 [2025년 5월 26일 기준]
  - 15,149건의 보조금 종료되었으며, 총(누적) 절감액은 약 400억 달러임.

〈표 2〉 연방정부 기관별 보조금 총(누적) 절감액 공개(절감액 상위)

기관명	수혜기관	사업 내용	날짜	절감액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가비 재단	GAVI5.0(2021-2025 전략)	3/1/2025	$1,750,000,000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텍사스주 보건부	현재 정보 없음	3/23/2025	$877,628,206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소아마비 및 예방접종 II 단계 사업	3/31/2025	$781,361,172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공중보건재단	현재 정보 없음	3/23/2025	$482,383,724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플로리다 보건부	현재 정보 없음	3/23/2025	$482,136,996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 부동산 임대 계약 종료
  - 총 494건의 임대가 종료되었으며, 총(누적) 절감액이 약 2억 16백만 달러임

〈표 3〉 연방정부 기관별 임대 계약 종료 총(누적) 절감액 공개(절감액 상위)

기관명	위치	설명	날짜	면적(제곱피트)	절감액
국립공원관리청	웨스트버지니아 찰스타운	대량 계약 수정으로 인한 종료	3/4/2025	39037	$9,539,468
국무부 사무국	콜로라도 댄버	대량 계약 수정으로 인한 종료	2/26/2025	86809	$9,455,746
지질조사국	유타 모아브	대량 계약 수정으로 인한 종료	3/4/2025	35358	$8,105,077
국무부 사무국	푸에르토리코 하토레이	대량 계약 수정으로 인한 종료	3/4/2025	25985	$7,875,004
인디언 사무국	애리조나 피닉스	대량 계약 수정으로 인한 종료	2/25/2025	71591	$7,293,384
자연자원보전청	아이다호 보이시	대량 계약 수정으로 인한 종료	2/24/2025	44623	$5,623,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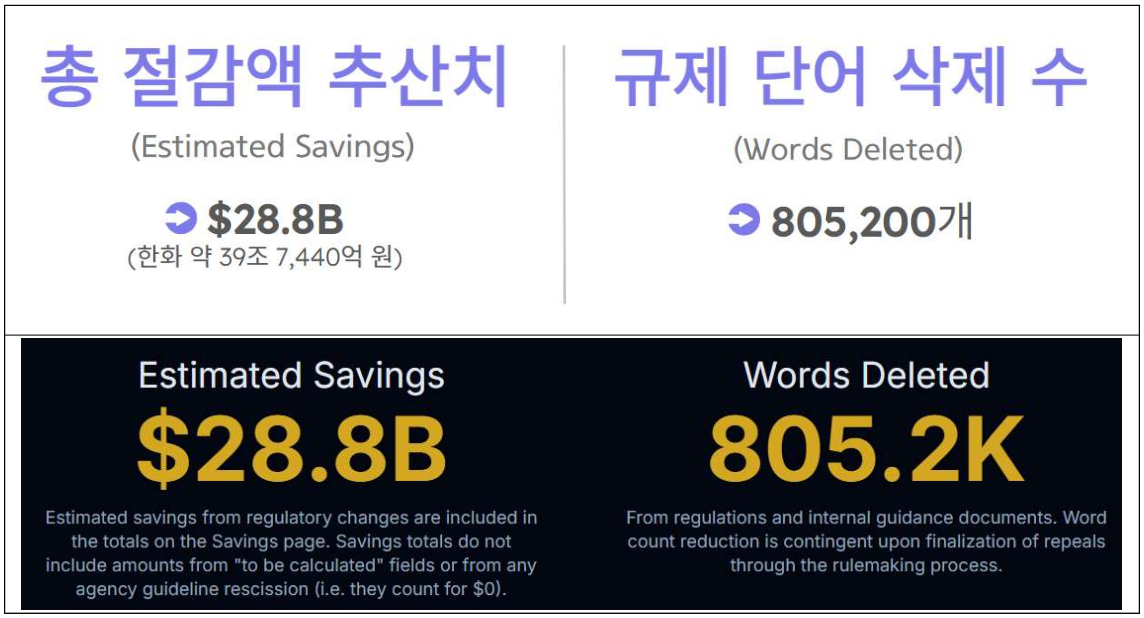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2. 규제 개혁(Regulations)

- 규제 개혁에 따른 총 절감액 추산: 288억 달러
  - 규제 변경(개혁)으로 인한 예상 절감액은 '절감액(Savings)' 페이지의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절감액 총계에는 '계산 예정(to be calculated)' 항목이나 기관 지침 철회(guideline rescission)로 인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0달러로 간주됨

- 규제 및 내부 지침 문서 단어 삭제: 80만 5,200개
  - 규제 및 내부 지침 문서로부터 계산. 단어 수 감소는 규제 철회가 규제 제정 절차(rulemaking process)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에만 적용됨

〈그림 4〉 규제 개혁에 따른 총 절감액 추산치 및 규제/지침 단어 삭제 수 공개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 부처별 규제 개혁(규제 철회 목록 및 비용 절감 추정치) 순위 발표
  - 아래는 현재 제안되었거나 최종 확정된 규제 철회 목록이며, 각 철회를 통해 미국 국민이 얻게 될 비용 절감 추정치가 함께 제시되어 있음. 규제 철회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될 경우, 대부분 문서 내에 절감 추정치의 세부 내역이 포함됨. 정식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기관의 내부 계산을 바탕으로 수치가 산정됨. 기관들은 내부 지침 문서도 함께 철회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은 곧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임

〈그림 5〉 연방정부 기관별 규제 개혁 순위 공개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표 4〉 연방정부 기관별 규제개혁 목록

기관	규제 제목	조치 유형	CFR 조항	날짜	절감액	삭제된 단어수
보건복지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오바마케어)	NPRM(규칙 제정 예고)	45 CFR Parts 147, 155, 156	2025-03-01	$10.0B	1.3천 단어
소비자금융 보호국	신용카드 벌금 수수료 (규정 Z)	Judicial	12 C.F.R. 1026.52	2025-04-01	$9.5B	299 단어
소비자금융 보호국	초대형 금융기관의 당좌대출 규제	CRA Repeal 의회검토법(CRA)에 따른 규제철회	12 C.F.R. 1005.17	2025-04-01	$5.2B	2천 단어
에너지부	개정된 물 사용 기준 철회	NPRM	10 CFR 431	2025-05-01	$1.98B	43
에너지부	개정된 물 사용 기준 철회	NPRM	10 CFR 430.32	2025-05-01	$378.8M	7
에너지부	개정된 물 사용 기준 철회	NPRM	10 CFR 430.32	2025-05-01	$341.0M	42
에너지부	에너지 효율 기준 철회	NPRM	10 CFR 431.136	2025-05-01	$278.6M	0
에너지부	에너지 효율 기준 철회	NPRM	10 CFR 430.32	2025-05-01	$270.8M	618

〈표 5〉 지침 철회/단어 삭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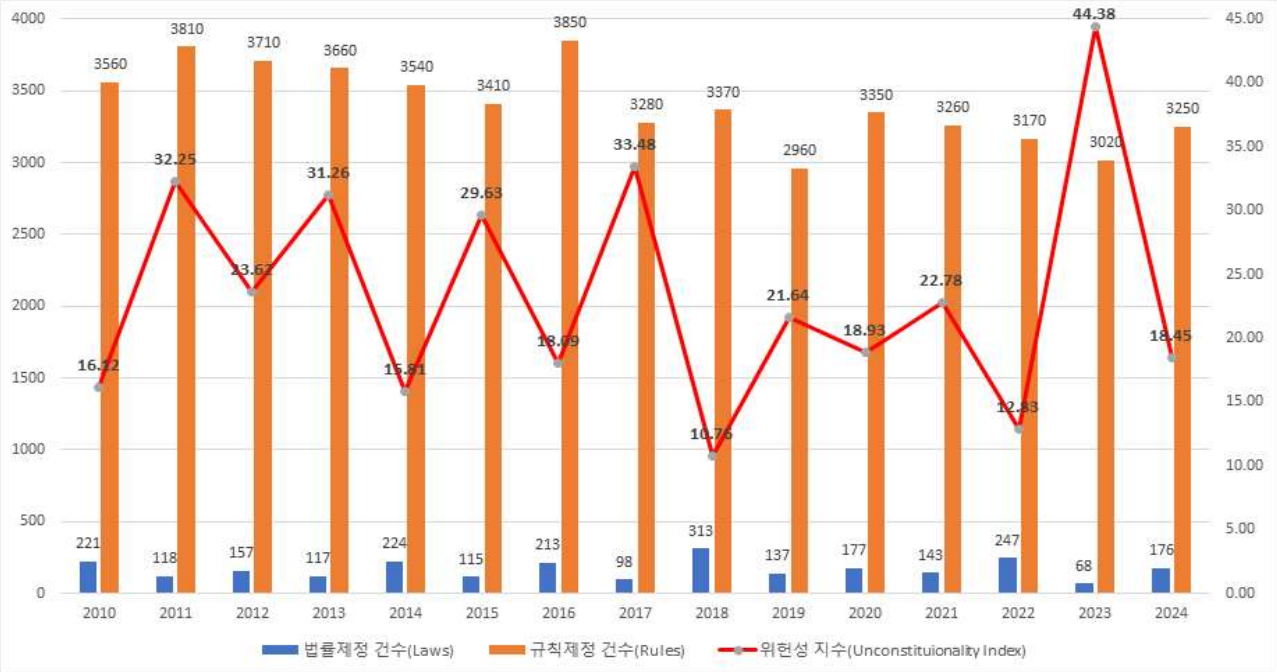
제목	정책 분야	조치	삭제된 단어 수
WIC 정책 지침 #2015-3 – 현금성 바우처(CVV)로 흰 감자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 허용 여부	불필요한 지침 철회	철회(Rescission)	497
WIC 정책 지침 #2007-4 –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예산 승인 절차의 정책 변경	불필요한 지침 철회	철회(Rescission)	402
WIC 정책 지침 #2000-5 – WIC와 CSFP를 운영하는 주 및 지방 기관 간 협력	불필요한 지침 철회	철회(Rescission)	1,400
VSM 570.9 질병 프로그램 전담 역학조사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요건	불필요한 지침 철회	철회(Rescission)	1,500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Buy Now, Pay Later)' 대출 이용을 위한 디지털 사용자 계정의 사용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철회(Rescission)	5,000
교통부(DOT) 구매카드 정책 개정	DOT(교통부)	수정(Revision)	409
진실한 대출법(규정 Z); 민간 학자금 대출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철회(Rescission)	5,700
진실한 대출법(규정 Z); 선급 임금 접근 프로그램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철회(Rescission)	4,800
진실한 대출(Regulation Z); 소비자 보호 조치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철회(Rescission)	5,100
진실한 대출(Regulation Z); 소비자 신용 규제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철회(Rescission)	2,600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 위헌성 지수: 18.5 / 법 176개, 규칙 3,250개 [2024년 기준]
  - 위헌성 지수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 한 건당,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행정부 규제 기관)이 만든 규칙의 수를 나타냄. 즉, 2024년에 제정된 법률 한 건당 평균 18.45개 행정기관 규칙이 만들어졌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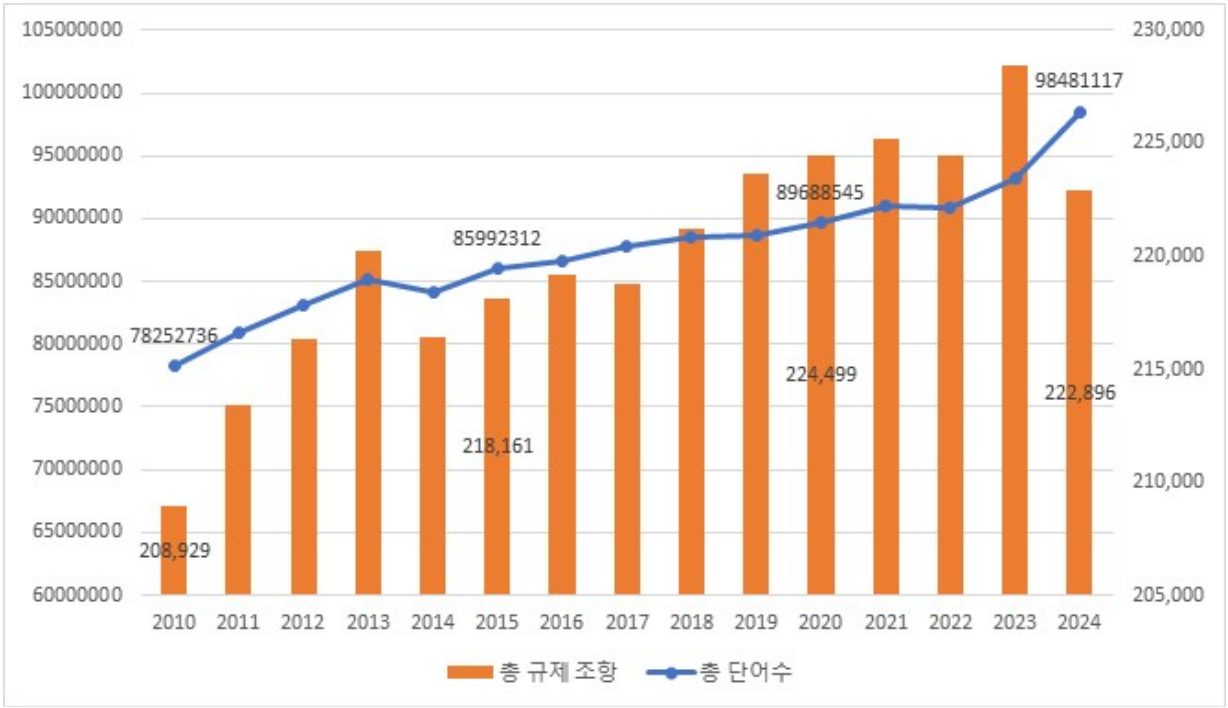
- 연방 규제 코드: 총 단어 9,868개 / 총 규정 조항 215,230개 [2024년 기준]
  - 연도별 규제 코드(규정) 현황을 공개함과 동시에, 부처 및 기관별 규제 단어 수와 조항 수를 공개하고 있음

〈그림 6〉 위헌성 지수



주1: 위헌성 지수: 규칙제정 건수/법률제정 건수(미국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률 한 건당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행정부 규제기관)이 제정한 규칙 수.
주2: 규칙제정 건수는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에 1,000(K)단위의 공개된 수치를 그대로 썼으나 1의 자리가 누락되어 있음.
주3: 규칙제정 건수는 좌측 세로축, 법률제정 건수와 위헌성 지수는 우측(보조) 세로축.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그림 7〉 연방 규제 코드 현황 공개



주: 총 단어수는 좌측 세로축, 총 규제조항은 우측(보조) 세로축.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표 6〉 연방정부 기관별 규제 총 단어/조항 수

부처 / 기관명	규제 문서 총 단어 수	규정 조항 수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1,452만	16,070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218만	20,220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724만	18,640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702만	21,060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626만	15.500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609만	16,680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18만	16,600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446만	11,080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267만	4,830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258만	5,790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227만	4,710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25만	5,150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188만	4,330
주택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77만	5,030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System)	168만	1,470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37만	2,060
재향군인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32만	3,330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125만	3,340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3.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 재정 적자(Spend)

- 기관별 지출 현황: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1.5배 증가
  - 연방정부 기관별 지출 총액을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기간, 회계연도 2019년 대비 2024년을 비교 공개 중인데, 2019년 4.45조 달러 대비 2014년 6.75조 달러로 51.7%p 증가함

〈표 7〉 연방정부 기관별 지출 현황 공개 (단위: 십억 달러)

기관명	FY2019 지출	FY2024 지출
보건복지부 (HHS)	$1,213.8B	$1,720.6B
사회보장국 (SSA)	$1,101.8B	$1,519.7B
재무부 (Treasury)	$689.5B	$1,311.9B
국방부 (DoD)	$654.0B	$826.3B
제향군인부 (VA)	$199.6B	$325.0B
교육부 (Education)	$104.4B	$268.4B
농무부 (USDA)	$150.1B	$203.4B
인사관리실 (OPM)	$103.1B	$126.2B
교통부 (Transportation)	$80.7B	$117.4B
국토안보부 (DHS)	$56.3B	$89.3B
독립기관 (Independent Agencies)	$19.6B	$77.8B
기타 국방 민간 프로그램	$60.9B	$66.2B
노동부 (Labor)	$35.8B	$65.7B
주택도시개발부 (HUD)	$29.2B	$52.0B
에너지부 (Energy)	$28.9B	$49.3B
법무부 (Justice)	$35.1B	$44.0B
국무부 (State)	$28.0B	$37.0B
국제 원조 프로그램	$23.6B	$35.8B
중소기업청 (SBA)	$0.5B	$33.2B
NASA	$20.2B	$25.0B
내무부 (Interior)	$13.9B	$17.1B
상무부 (Commerce)	$11.3B	$14.7B
환경보호청 (EPA)	$8.1B	$13.7B
육군 공병대 (Corps of Engineers)	$6.5B	$11.3B
사법부 (Judicial Branch)	$8.0B	$9.5B
국립과학재단 (NSF)	$7.3B	$9.4B
입법부 (Legislative Branch)	$5.0B	$6.8B
대통령실 (EOP)	$0.4B	$0.6B
총무청 (GSA)	-$1.1B	-$0.2B
기타 상쇄 수입	-$247.8B	-$330.6B
총 지출	$4,446.6B	$6,746.5B
증가율 (FY2019 대비 FY2024)		+51.7%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 연방정부 세입 현황: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직접세 위주 세수 증가
  - 연방정부 세입은 회계연도 2019년 3.46조 달러 대비 2024년 4.92조 달러로 1.46조 달러(42%p) 증가하였음
  - 내국소비세, 관세 등의 증가는 크지 않으나, 법인소득세와 상속·증여세 2배 이상 혹은 가까이 증가했으며, 개인소득세는 지난 5년 간 41.2%p 증가함. 이는 지난 5년 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 위주로 세수를 늘려왔기 때문임

〈표 8〉 연방정부 세목별 세입 현황 공개 (단위: 십억 달러)

수입 항목	FY2019 수입	FY2024 수입
개인소득세	$1718.0B	$2426.0B
법인소득세	$230.0B	$530.0B
사회보장세	$1243.0B	$1709.0B
내국소비세	$99.0B	$101.0B
상속 및 증여세	$17.0B	$32.0B
관세	$71.0B	$77.0B
기타 수입	$85.0B	$43.0B
총 수입	$3,463.0B	$4,918.0B
증가율 (FY2019 대비 FY2024)		+42.0%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 연방정부 재정 적자: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1.9배 증가
  - 연방 재정 적자는 회계연도 기준 2019년, 9,844억 달러에서 2024년, 1.83조 달러로 증가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5년 간 약 1.9배(85.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입 보다 세출을 더 많이 쓰는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왔기 때문이며, 그만큼 재정 적자 규모도 커진 것임

〈표 9〉 연방정부 재정 적자 공개 (단위: 십억 달러)

항목	FY2019	FY2024
연방 재정 적자	$984.4	$1,830
증가율 (FY2019 대비 FY2024)		+85.9%

4. 공무원과 인건비 감축(Workforce)

- 행정부(Executive Branch) 전체 조직과 인력, 인건비
  - 총 인력/공무원 수(Headcount): 2,252,162명
  - 하위 부처 수(Surbordinate Offices): 16,436개
  - 총 임금(Total Wages): 2,113억 달러
  - 평균 근속연수(10년), 평균 연봉($93,828), 평균 연령(47세)

- 내각(Cabinet) 수준 조직과 인력, 인건비
  - 총 인력/공무원 수(Headcount): 2,078,428명
  - 하위 부처 수(Surbordinate Offices): 11,417개
  - 총 임금(Total Wages): 1,900억 달러
  - 평균 근속연수(10년), 평균 연봉($91,400), 평균 연령(47세)

〈표 10〉 행정부(위)/내각(아래) 조직·인력 현황 공개

정부수준	총 인력 수	하위부처수	총 임금	평균 근속연수	평균연봉	평균 연령
행정부 (Executive Branch)	2,252,162명	16,436개	$2,113억	10년	$93,828	47세
내각(Cabinet)	2,078,428명	11,417개	$1,900억	10년	$91,400	47세

주: 상기 자료는 미국 인사관리실(OPM)의 2024년 3월 기준 통계로, 군대, 우편서비스, 백악관, 정보국 등은 제외된 것임.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 부처별 조직·인력·인건비 현황 공개
  - 미국 정부(U.S. Government), 행정부(Executive Branch), 내각 부처별(Cabinet Level Agencies), 부처 내 행정조직별(Departmental Adminstration) 등 세부 행정 단위까지 조직·인력·인건비 현황 공개 중

〈표 11〉 연방정부 부처별 조직·인력·인건비 현황 (단위: 십억 달러)

부처	총 직원 수(명)	하위 부처 수(개)	총 임금(달러)
Department Of Agriculture(농무부)	92,072명	774개	78억 달러
Department of Commerce(상무부)	47,650명	272개	58억 달러
Department of Defense(국방부)	157,527명	271개	14.9억 달러
Department of Education(교육부)	4,245명	346개	5억 9,600만 달러
Department of Energy(에너지부)	15,271명	558개	18억 달러
Department of Justice(법무부)	116,613명	318개	57억 달러
Department of Labor(노동부)	14,370명	446개	17억 달러
Department of State(국무부)	14,316명	993개	19억 달러
Department of the Air Force(공군부)	166,783명	108개	153억 달러
Department of the Army (육군부)	196,323명	506개	189억 달러
Department of the Interior (내무부)	3,252명	812개	4억 2150만 달러
Department of the Navy (해군부)	216,537명	1,253개	222억 달러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교통부)	55,806명	518개	77억 달러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재향군인부)	486,522명	797개	504억 달러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보건복지부)	91,058명	923개	117억 달러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222,538명	1,676개	86억 달러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주택도시개발부)	45명	464개	720만 달러
Department of the Treasury(재무부)	108,869명	364개	82억 달러

출처: 미국 정부효율부(DOGE) 홈페이지(https://www.doge.gov/).

Ⅳ 미국 트럼프 행정부 행정개혁 분석과 한국적 시사점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활동과 행정개혁 분석

- 정부효율부 설립과 활동
  - 연방 의회 법률 통과 없이 대통령실 내 한시조직 형태 운영
  - 전체적으로 임무는 디지털 전환, 규제개혁, 비용절감, 조직·인력 감축/효율화 등 4가지로 요약되며 전형적인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행정개혁 사례로 보임

〈표 12〉 정부효율부 설립 및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목적	·대통령의 DOGE 아젠다(연방정부의 효율성·생산성 극대화) 시행 ·연방정부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
수장	·일론 머스크(5월 29일, 130일 특별공무원 임기 종료)
설립방식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의 개편 DOGE 서비스 임시조직(US DOGE Service Temporary Organization)으로 설립 ·임시조직: 18개월 한시조직(2026년 7월 4일 종료 예정)
실무추진 부서	·각 기관별 DOGE팀 구성(최소 4인, 팀장/기술자/인사전문가/변호사)
임무	·디지털 전환(정부 전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IT체계 품질·효율성 개선 등 소프트웨어 현대화 및 접근성 제고, 기관 간 네트워크 및 시스템 상호운용성 촉진, 데이터 동기화 지원 등)
	·규제 완화 주도(행정국가 해체, 10대 1 규제 철폐, 규제 철회/완화 등 통합규제 계획 수립, 연방정부 과도한 개입 종식)
	·비용 효율성 계획 시행(비용 절감 및 부동산 처분, 투명성·책무성 제고)
	·인력 최적화 계획 시행(인력규모 축소 계획 수립 및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등 연방 공무원 개혁 통한 효율성·생산성 극대화) ·관료제 조직 감축(법률 미명시 기능·부속조직 폐지, 최소한 인력·기능 유지 조정)
홈페이지	·DOGE 홈페이지 구축·운영 ·수치화 된 절감액, 규제개혁, 조직·인력 감축 현황·통계 공시

- 규제개혁
  - 1대 10 규제 철폐: 신규 규제 제정 시 기존 규제 1개 폐지
  - 신규 제정 규제 총 순비용 0 미만(기존규제 10개 이상 폐지로 규제비용 상쇄)
  - 관리예산실 기관별 연간 규제비용 보고 및 신규 규제 실장 승인 절차 필수, 각 기관별 규제 총 순비용 상한 제시

〈표 13〉 정부효율부 규제개혁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취지/목적	·행정국가 해체 및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 종식, 헌법적 권력분립 회복 ·규제는 미국인의 삶에 비용 초래 및 경제성장 저해, 국제경쟁력 약화 ·규제 준수 비용 민간 지출 감축, 규제철폐 및 신규 규제비용 관리
활동1 2025 회계연도 규제 상한선	·1대 10 규제 철폐: 신규 규제 제정 시 기존 규제 최소 10개 폐지
	·2025 회계연도 기준, 신규 제정 규제 총 순비용 0 미만 ·새 규제 관련 신규 순비용은 기존 규제 10개 이상 폐지 통해 상쇄
	·관리예산실장 지침: 규제 비용 측정/추정 방식, 신규 및 상쇄 규제 판단 기준, 기존 규제비용 산정 기준, 회계연도별 비용 처리 방식, 규제 발행 시점 및 기관 간 비용 상쇄 방식 등
활동2 관리예산실 제출용 기관별 연간 규제비용 보고	·신규비용 수반 규제와 해당비용 상쇄 규제 집계 보고, 규제별 비용 및 절감액 추정치
	·대통령 예산안 작성 과정 실장 승인 모든 규제는 통합규제 의제 포함
	·법률 근거 없는 통합규제 미포함 규제, 실장 사전 서면미승인 시 발행 불가
	·대통령 예산안 작성 시 실장은 각 기관별 허용 총 순비용 한도 제시, 이 한도 초과 규제는 법률상 요구 혹은 실장 서면 미승인 시 불가
	·본조항 이행 추가 지침 각 기관장에 제공
활동3 위법 혹은 국가이익 저해 규제 철회	·각 부처 장관은 DOGE 팀장 및 관리예산실장과 협력, 해당 부처의 모든 규제가 관련 **법률 및 행정부 정책과 일치 여부 검토**(*7개 유형 분류) 착수 후 정보규제관리실장에 제출→정보규제관리실장, 통합규제 계획 수립 ***7개 유형: 1)중대 헌법 문제 야기, 2)입법 권한의 위법한 위임, 3)법령의 해석 오류, 4)명확한 법적 권한 없이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중대 사안 다루는 규제, 5) 민간에 상당한 비용 부과 대비 공공 이익 낮은 규제, 6)국익 저해, 7)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및 민간기업 활동·창업 방해** ·각 부처 장관, 헌법·법률 및 행정부 정책 미부합시 집행 절차 종료 지시(규제 철회)
공개	·규제개혁에 따른 추산 총 절감액, 규제 및 내부 지침 문서 단어 삭제 현황 공개 ·연방정부 기관별 규제 개혁 순위 발표 및 지침 철회/단어 삭제 목록 공시 ·위헌성 지수(의회 통과 법률 1건당 행정부 규제기관 제정 규칙 수) 및 연방 규제 코드 수치화 공개

- 정부 지출(비용) 절감(감축) 및 효율화
  - 정부 지출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 계약/보조금 관련 모든 지불 관련 중앙기록체계 확립(사유서 제출 의무화) 및 검토(종료 혹은 수정), 절차 검토(계약 정책, 절차 및 인력), 월간 정보보고
  - 불필요 여행(출장) 중앙기록체계 구축 및 사유 제출
  - 연방 부동산(자산)관리 시스템 보고/최신화 및 임대 해지 검토

〈표 14〉 정부효율부 지출/비용 절감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목적	·계약, 보조금 및 대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출 변화 ·정부 지출 투명성 확보 및 국민에 대한 책무성 보장 → 세금 낭비 종지부, 국민 세금 낭비 및 지출 관련 알 권리 인정
납세자 돈(세금) 절약 위한 비용 절감(감축)	·계약 및 보조금 정당화: 계약/보조금 모든 지불 기록 중앙집중식 기술시스템 구축 및 서면사유서 제출 의무화(미제출 시 지불 일시중지, 신속검토 절차)
	·계약 및 보조금 검토: 기존 계약/보조금 검토 후 전반적인 연방 지출 감축 및 효율성 촉진 목적 계약/보조금 종료 혹은 수정(30일 이내 완료), 교육기관·외국기관 대상 계약/보조금에 대해 낭비·사기·남용 우선 검토
	·계약 및 보조금 절차 검토: 각 기관장, DOGE 팀장과 협의 각 기관 계약 정책, 절차 및 인력 포괄적 검토(30일 이내 완료)
	·계약 및 보조금 승인: 신규 계약 체결 전 각 기관장, DOGE 팀장과 협의 하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 수정 지침 발행 의무. DOGE 팀장 계약 활동 월간 정보보고서 보고 의무. 지불 정당화 필요내용 포함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출장) 정당화: 각 기관 내 회의 및 기타 미필수 여행(출장) 승인의 중앙기록 기술시스템 구축, 정당화 서류 미제출 시 불허
	·신용카드 동결: 모든 기관 직원 보유 신용카드 30일간 동결
	·부동산 처분(보고·임대): 각 기관장, 7일 이내 연방부동산 프로필관리시스템에 재고 업데이트 제출 확인, 30일 이내 정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에 따라 기관장 모든 해지 권한 식별 및 해당 권리 행사 여부 결정
각종 구체적 활동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십억 달러 낭비 정치적 성향 비효율적 프로그램 전방위적 조사 및 국익 미부합 계약/보조금 전면 취소 ·5천만 달러 환경정의보조금 취소, DEI(다양성·형평·포용) 확산 150만 달러 규모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교육부 8억 8천만 달러 규모 불필요한 계약 취소, 바이든 행정부 유실 19억 달러 세금 회수
공개	·절감액/납세자 1인당 절감액 총액 공시 ·전 기관 효율성(지출 절감) 순위 공개 ·기관별 계약해지 및 절감액, 기관별 보조금 종료 및 총 절감액 공개 ·연방정부 기관별 부동산 임대 계약 종료 및 총 절감액 공개

- 정부 조직·인력 감축 및 효율화
  - 연방정부 인력규모 축소계획 수립(채용 동결, 퇴직자 4명당 1명만 신규채용)
  - RIF 대상부서 대규모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이행보고서 제출
  - 연방 관료제 범위 축소 명시 및 폐지·조정, 이행보고서 제출

〈표 15〉 정부효율부 조직·인력 감축 및 효율화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목적	·연방 관료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낭비·비대화·폐쇄성 제거) ·불필요 판단 연방 관료제 요소 감축 지속 추진
연방 공무원 개혁 통한 효율성·생산성 극대화 (인력 효율화)	·채용비율: 2025.1.20. 대통령 각서 채용 동결, 관리예산실장, 연방정부 인력 규모 축소계획 수립(퇴직자 4명당 1명만 신규 채용, 국세청 적용 채용동결 계속 유지, 공공안전/이민집행, 법 집행 관련 업무 미적용)
	·채용 승인: 각 기관장 DOGE 팀장과 협의 신규 채용 긴급 필요시 한정, 채용 부적절 판단 직위 미채용, 매달 기관 채용 현황 DOGE 서비스 보고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각 기관장 대규모 구조조정 준비, RIF 대상부서(법률 미명시 모든 사무국, DEI관련 사업, 트럼프 행정부 중단·폐쇄 사업·기능, 관리예산실 기관별 비상계획 '필수인력' 미지정 부서/직원) 임시직/재고용 연금수급자 간 계약 종료 준비 시작
	·조직 재편 계획 수립: 기관장 30일 이내 해당 기관 및 하위 구성요소 중 법률 조직 식별, 폐지/통합 가능 여부 포함 보고서, 관리예산실장에 제출
	·이행보고서 제출: 240일 이내 USDS 행정관 대통령에 본 명령 이행 현황 보고 및 각 조항 연장·수정·종료 여부 권고 포함
연방 관료제 감축 지속 (조직 효율화)	·연방 관료제 범위 축소: 연방 중재·조정서비스, 미국 글로벌미디어청, 스미소니언 산하 우드로윌슨 국제학자센터,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소, 미국 노숙자간정부위원회,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기금, 소수민족기업개발청 등 법률 미명시 기능/부속조직 폐지(법률 허용 최대 범위) 및 법률상 요구 최소한의 인력과 기능만 유지 조정
	·7일 이내, 상기 열거 각 기관장 자신의 기관이 본 명령 전면 이행보고서 관리예산실장에 제출(법적 필수 부분과 구체적 범위 설명 포함)
공개	·행정부/내각/부처 등 행정단위 수준별 조직·인력·인건비 세부정보 공개

2. 한국적 시사점

- 대통령 직속 정부 행정개혁 총괄 컨트롤 타워 부처 설립·운용
  - 미국 정부효율부는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지출·조직·인력 감축 등 정부 행정개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기간이 명시된 한시조직으로 출범함. 추가적으로 각 부처 및 기관별로 DOGE 팀 구성 및 팀장에 대한 역할·권한 부여를 통해 각 기관의 실질적·실무적 추진력을 높였음
  -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 및 부처간 역할 및 업무분담, 조정의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전담했으나, 컨트롤 타워로써 부처간 할거주의 극복이 쉽지 않아왔음.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으로 운용했을 때는 임시조직이라는 유사성은 있으나 부처를 넘어서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새정부에서 규제개혁 및 재정·조직·인력 등 정부규모 축소를 해야 한다면, 별도 부처 형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각 부처별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부서(팀제)의 설립도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임

- 행정개혁 전담부처(DOGE) 홈페이지 구축·운용을 통한 실질적 성과 공개
  - 정부효율부(DOGE)는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나, 기존 부처의 일반적인 웹사이트와는 다르게 활동에 따른 결과 취합 및 실질적 성과, 특히 금액(절감액), 규제개혁 수, 규제비용/지출 감축액, 조직·인력 감축 등 수치화된 형태로 제공해 대국민 수요자 중심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눈여겨 볼 만한 규제개혁: 1대 10 규제 철폐, 신규 규제 순비용 0미만
  - 1대 10 규제 철폐: 신규 규제 1개 제정 시 기존 규제 10개 폐지
  - 신규 규제 순비용 0미만: 새규제 순비용을 기존 규제 10개 이상 폐지로 상쇄
  - 기관별 규제총량제 실시
  - 7개 유형 위법·국가이익 저해 규제 검토/철회, 기관별 연간 규제비용 보고 의무
  - 규제개혁에 따른 추산 총/기관별 절감액 및 규제 삭제 현황 수치화 공개
  - 위헌성 지수 발표

- 정부 지출 효율화: 계약/보조금 전면 재검토/취소, 전 기관 효율성 순위 공개
  - 정치적 성향 비효율적 프로그램 전방적 조사 및 헌법·법률/행정부 정책 및 국익 미부합 계약/보조금 전면 취소
  - 계약/보조금 지불 기록 중앙기술시스템 구축 및 사유서 제출 의무화
  - 미필수 여행(출장) 전면 재검토 중앙기록시스템 구축
  - 연방 자산/부동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임대 해지
  - 총 지출 절감액 및 납세자 1인당 절감액 등 대국민 수요자 중심 공시
  - 전 기관 효율성 순위 전면 공개
  - 총/기관별 계약해지/보조금 종료 현황 및 절감액 공개
  - 연방정부 총/기관별 부동산 임대 계약 종료 및 절감액 공개

- 정부 조직·인력 효율화: 연방 대규모 구조조정, 퇴직자 4명당 1명만 신규채용
  - 대규모 구조조정: 연방정부 인력규모 축소계획 수립, 4개 RIF 대상부서 폐지·조정
  - 채용 동결 및 퇴직자 4명당 1명만 신규채용
  - 행정부/내각/부처/하위행정 등 행정단위 수준별 조직·인력·인건비 정보 공개

Ⅴ 결론: 새정부 규제개혁과 정부 효율화 방향 제언

- 본 리포트에서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하기 위해 일련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과 정부효율부의 웹사이트 상 공개된 활동 내용 및 성과를 분석하였음

-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의 목적 및 역할·권한, 규제개혁, 재정지출 효율화, 정부 조직 및 인력, 정부효율부(DOGE) 활동 내용 및 성과를 웹사이트에 공개 및 공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및 정리하고 한국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이를 통해 21대 대통령 선출과 새정부 출범 시 정부조직 개편, 규제개혁 및 정부 재정·조직 효율화 등 행정개혁 추진을 위해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규제개혁 및 정부 효율화를 위한 대통령 지속의 컨트롤 타워로 행정개혁 전담부처 설립 및 각 부처별 실무추진 행정개혁 팀 신설 등 총괄 추진기구 및 부처별 실무 추진 조직 동시 운용 필요
  - 둘째, 행정개혁 전담부처 설립 시 홈페이지(웹사이트) 구축·운용을 통한 대국민 수요자 중심 실질적 활동 성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 셋째, 규제개혁 전략으로 1대 10 규제 철폐 및 신규 규제 순비용 제로화, 규제 철회 7개 유형화 및 이행, 기관별 규제총량제 등 필요
  - 넷째, 정부 지출 효율화 전략으로 헌법·법률·새정부 정책 및 국익 미부합 계약·보조금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전 부처별 효율성 순위(재정 절감 성과 수치화) 및 지출 절감액 수치화 공개 필요
  - 다섯째, 정부 조직·인력 효율화 전략으로 퇴직자 대비 신규채용 규모 제한(예, 2명 대비 1명), 인력규모 축소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폐지·조정 계획 수립 및 이행 필요

-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활동과 행정개혁은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등 행정개혁의 가시적·실질적 추진뿐만 아니라 대국민 수요자 중심의 투명성 확보 및 정부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참고할 가치가 큼

참고 문헌

- 김을식·박진아(2025), 美 정부효율부(DOGE) 정부개혁의 주요 내용과 함의, 경기연구원 GRI 이슈브리프(2025.4.14.(월)).
-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2025.1.20.)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2025.1.31.)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 대통령 행정명령(2025.2.11.)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Workforce Optimization Initiative.
- 대통령 행정명령(2025.2.19.) ENSURING LAWFUL GOVERNANCE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EREGULATORY INITIATIVE.
- 대통령 행정명령(2025.2.26.)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COST EFFICIENCY INITIATIVE.
- 대통령 행정명령(2025.3.14.) CONTINU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quires Transparency for the American People About Wasteful Spending.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requires-transparency-for-the-american-people-about-wasteful-spending/
- 미국 정부효율부(DOGE) 웹사이트(https://www.doge.gov/).
- 박정원(2025),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10일간의 개혁 조치와 공직 변화, 한국행정연구원 INSIGHT COMMUNICATION 2025 VOL. 173.
-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